

명 이상인 경우에는 20만원을 환불한다.

신청마감은 이번달 11일까지이다. 문의는 한국 포장기술연구소(전화 : (02)2026-8166)나 (주)태인여행사(대표이사 김선술 <H.P : 011-249-9990> / 전화:(02)735-7557)로 하면 된다.

강원도  
**원자재 가격 상승 피해기업 긴급지원**  
철강, 제지 및 플라스틱 업체 대상

강원도는 원자재값 파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자금 규모는 총 1백억원이며 기업당 3억 원 이내에서 연리 3%(2년 거치 3년 상환)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지난 달 24일부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각 시·군을 통해 신청받는다. 담보여력이 부족한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도는 강원신용보증재단과 '특례보증' 협약을 맺고 신용불량으로 인한 거래보증 제한기간을 신청일 현재로 완화하고, 심사기준도 대폭 생략했다.

지원대상은 석유류를 비롯 철강·제지 및 섬유 원료, 플라스틱업체 등이며 관련 원자재 가격이 30% 이상 상승했거나 이들 원자재를 40% 이상 취급하는 제조업들이다.

한편 도는 중소기업의 자금 및 판로 등에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난 달 19일부터 강릉시를 비롯 강원도 6개권역에서 기업애로 이동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김상표 산업경제국장은 "최근 원유가 급등과 환율변동으로 도내 중소기업들이 심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속한 자금지원으로 기업애로 해소에 발 빠르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1회용 컵 보증금제도 폐지**  
자율적 컵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장관 이만희)가 그동안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했던 「1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오는 지난 달 20일부터 폐지했다.

그동안 롯데리아, 맥도날드 등 패스트푸드점이나 스타벅스 등 커피전문점에서 고객이 1회용 컵을 이용할 때 부과하는 50~1백원의 컵 보증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고객이 1회용 컵을 구입한 매장으로 되가져 오는 경우에는 미환불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6월말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종전처럼 현금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업계가 자율적으로 1회용 종이컵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매장부근이나 공공장소 등에 컵 회수대를 설치하고, 이를 회수·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는 한편, 개별 업체별로 프로모션 캠페인 운동도 전개해 고객이 1회용 컵을 가져올 경우에는 횡수에 따라 할인쿠폰 또는 사은품 등을 제공하고, 개인컵을 소지한 소비자에게는 커피가격을 할인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발적 협약제도를 보완,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그동안 패스트푸드점 및 커피전문점은 환경부



와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 1회용품 한 개당 50~백원을 보증금으로 받은 뒤 이를 환불해 주거나, 환경장학금·환경보전지원자금으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미환불금을 기업의 판촉비용, 홍보비 등으로 사용함에 따라 미환불금 사용용도의 부당성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 왔으며, 1회용품 보증금에 대한 법적근거도 없이 소비자로 하여금 비용을 지불하게 했고,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에서도 소비자들에게 보증금을 부과, 자체 수입으로 처리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특히, 최근에는 종이컵 회수율도 감소추세에 접어들어 컵 보증금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업계나 소비자에게 불편만 가중시키는 제도로 판단, 컵 보증금제도의 시행여부를 업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도록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결정된 바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금년중에 국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현행 1회용품 사용규제제도를 계속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REACH 사전 등록 1:1 컨설팅 실시**  
 중소기업 대응 제고능력 향상

유럽연합(EU)의 新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가 2007년 6월 시행됨에 따라 EU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이 초기 당면과제인 사전등록('08.6.1~12.1)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EU로의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환경부(장관 이만희)는 우리나라 화학물질 관리 주무부서로서 국내 기업이 강력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REACH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REACH 대응 추진 기획단"을 발족하고, 그동안 REACH 제도 분석, 도움말센터(Helpdesk) 운영, 다각적 홍보·교육 및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 오으로써 REACH와 관련된 우리나라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런 노력의 결과, 설문조사에서 국내 기업의 'REACH 인식도'는 상당히 향상(1차('06,11) 33%→5차('07,11) 95%)됐지만, '사전등록을 문제없이 할 수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46%('07,11)에 불과해 정부의 REACH 사전등록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력, 재정, 관리능력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은 독자적, 적극적 대응의지가 부족해 REACH 대응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금년 6월부터 시작되는 사전등록에 국내 중소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지난 달 12일부터 21일까지 안산 등 5개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REACH 컨설팅(1:1 상담) 및 세미나』를 실시했다.

대다수 중소기업의 REACH 대응상 애로사항인 등록대상 물질 확인, 유일대리인 선임 등에 대해 문제점, 궁금증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REACH 서비스기관과 기업간 일대일 상담을 실시했으며 아울러 아직도 REACH를 잘 모르는 중소기업이 다수 있음을 감안, REACH 제도 및 사전등록 방법 등에 대한 세미나를 병행 추진했다.



식약청  
**식품위생기관 검사성적서 실명제 실시**  
 식품위생검사 책임성, 투명성 확보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이 식품위생검사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모든 검사성적서에 대해 책임실명제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앞으로 자가 품질검사결과 등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할 때는 해당 제품의 검사관리책임자 및 시험분석 실무자의 실명을 기재, 검사의뢰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식약청은 “책임실명제가 실시되면 검가기관간 검사능력 제고 및 양질의 품질 서비스 경쟁으로 이어져 검사기관 이용자의 고객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FTA 등 검사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력 확보 및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사기관의 장비 현대화 및 지도 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내 민간 식품위생검사기관수는 1987년 최초 지정 이래 66개소에 달하고 있으며 수입 식품, 농산물, 기구, 용기, 포장 등에 대한 시험검사 및 국내 식품제조업소의 자가 품질 위탁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이들 검사기관이 처리하는 자가품질검사 건수 또한 늘어나 2004년 22만5천2백66건에서 2005년에는 27만4천23건, 2006년에는 42만7천8백12건 등으로 매년 약 20~50% 씩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수입식품이 2006년 기준으로 정밀검사 건수 4만9천5백23건중 2만9천6백63건(60%)에 달하는 등 민간 검사기관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한국환경자원공사  
**수입 의존 폐자원 가격 고공 행진**  
 재활용 활성화 시급

한국환경자원공사(사장 고재영)는 지난해 1월 평균 90.6원/kg이던 폐신문지의 가격이 12월에는 평균 1백41원/kg이었고, 폐골판지는 1월 평균 58.8원/kg에서 12월 평균 1백24.8원/kg으로, 폐금속캔은 1월 평균 1백32.5원/kg에서 12월 평균 1백97.3원/kg으로 올랐다.

올해 1월에도 세 품목의 평균가는 각각 1백46.9원/kg, 1백28.8원/kg, 2백9.4원/kg으로 집계돼 가격 상승은 계속될 전망이다이라고 밝혔다.

폐지의 경우, 매년 중국의 폐지 수입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세계시장에서 폐지 공급 증가는 둔화돼 수입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있으며, 폐금속캔 등의 고철류 역시 철 스크랩의 수급 부족에 따른 가격 인상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이명수 산업진흥실장은, 폐지와 철 스크랩이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 품목인 만큼 국제유가가 1백달러에 육박하면서 원자재 가격도 급등하는 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활속에서 발생하는 폐신문지, 폐골판지, 폐금속캔의 분리배출과 재활용에 국민 여러분의 노력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